

행정안전부, 고유가·고물가 부담 경감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9조 5,240억원 편성

-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시기, 사용처, 지급 방법 등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

-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·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, 청년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9조 5,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.
-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 31일(화)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,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.
-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,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% 국민에게 1인당 10만~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, 총 예산 4조 8,252억원을 편성하였다.
- 소득 하위 70%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, 비수도권 15만원,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,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, 한부모가족·차상위계층은 45만원,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.

구분	소득하위 70% (3,256만명)	차상위·한부모 (36만명)	기초수급자 (285만명)
수도권	10만원	45만원	55만원
비수도권	15만원	50만원	60만원
인구감소(우대/49개)	20만원		
인구감소(특별/40개)	25만원		

- 구체적인 지급대상,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.

- 이와 함께,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 195억원도 포함하였다. 중동전쟁 위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에게 돌봄, 문화,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청년실업과 지역사회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아울러,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 6,793억원을 편성하여, 각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과 현장 수요에 맞게 민생안정,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신속히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한다.
-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으며, 아울러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,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도 함께 보강했다”고 강조하며,
- “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신지혜 (044-205-1401)
		담당자	사무관	서민호 (044-205-1411)
	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수경 (044-205-3702)
		담당자	서기관	강민철 (044-205-3703)
	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	책임자	과 장	지용구 (044-205-3751)
		담당자	사무관	권순현 (044-205-3754)
	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	책임자	과 장	염성욱 (044-205-3211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우 (044-205-3212)